

[종합·해설]

4대강 살리기 광주·전남 설명회

“영산강 하구둑 통선갑문 확장 뱃길 트겠다”

광주천 수질개선해야 영산강 살리기 효과

지역의무도급제 도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영산강을 비롯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누락돼 사업 축소 우려(본보 7일자 1·3면 보도)가 제기됐던 영산강 하구둑 통선갑문 확대 현안이 사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 하구둑 통선갑문의 너비를 현재 6m에서 60m로 확장, 뱃길을 트는 이 사업은 영산강 뱃길 복원의 핵심 사업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7일 오전 광주 여성발전센터와 오후 나주시청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영산강 사업에 선박 운항계획이 없어 통선갑문 확장사업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배의 운행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포뮬러원(F1) 대회,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등 전남도의 현안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에 정부가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 이달 말 확정될 마스터플랜 반영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의무 공동 도입제=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핵심과제로 물 확보와 강 중심 지역 발전,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수질 생태 복원, 홍수 방어 등을 제시했다.

또 4대강 별로 보상센터를 설치해 주민 면담과 홍보를 확대하면서 경작

지 보상을 하는 한편, 지역의무공동 도입제를 도입해 지역업체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산강 살리기를 위해선 보설치와 하도 준설을 통해 용수 공급능력을 1억t/a량 늘리고 평상시에는 생태습지로, 홍수기에는 담수 지로 이용하는 홍수조절지를 담당과 협순에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토론회=광주시와 전문가들은 “영산강의 수질개선·관광 지원화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광주천 수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현주 광주시 환경녹지국장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는 광주시(광주천)에서 유입되는 오수의 차단에 달려 있다”며 “영산강 수질 개선과 직결되는 광주 도심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방수수질 개선 사업 등 모두 6개 수질개선 사업에 모두

2·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현행 국고보조금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국고보조율이 10~30%에 그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장, 마을 하수도 사업 등에 대한 광역시 하수도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도청 소재지, 일반 시·군과 같은 50~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전남 토론회에서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발주를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업체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영산강 사업을 J프로젝트·F1대회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7일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개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광주지역 설명회’에서 토론자들이 영산강 현안을 토의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상현 서기관은 “지자체에 사업물량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영산강 사업을 F1대회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형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술심의관은 “수련된 의견들을 모아 이 달 확정될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토론회에서 입나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대규모 강 토목공사가 진행된 후에 바로 하천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영산강의 경우 5~6급수에

서 3년여 만에 수질이 3단계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영산강운하백화 광주·전남시민행동은 광주여성발전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는 의견수렴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선전장”이라고 주장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수박람회는 남해안 선벨트 태동지 랜드마크 개발·한려 해상 활용 필요”

‘박람회 성공 개최’ 국제심포지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랜드마크 시설의 개발과 ‘한려 해상’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이 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녹색섬상권 구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최승남 한양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여수엑스포는 해양관광 활성화의 진원지이다. 가장 매력적인 관광이벤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학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해양관광과 남해안 발전·여수세계박람회의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여수엑스포는 남해안 지역발전의 출발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체계화를 하며 남해안 선벨트 프로젝트의 태동지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에 해양관광 기회를 확산하는 한편 해양관광정책을 논의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수엑스포를 관광이벤트로 성공시키기 위해 해양 컨셉의 ‘한려쇼’ 개발과 남해안 패키지 관광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영국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남해안권 발전전략·선벨트 사업”이란 주제 발표문에서 “여수엑스포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남해안 개발 계획에 상응하고 중화학공업

보다는 인근 해안의 자연을 이용하는 새로운 추진력으로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과 관련, 최 본부장은 수송 부문에서 “여수공항의 수용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국제공항과의 연계 수송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또 여수 크루즈항과 주요 크루즈항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수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기 위한 ‘여수항 재탄생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 엑스포 행사장 인근의 여수시 경관 조성 ▲ 구여수항에서 신여수항으로 이어진 해변 개발 ▲ 해변 주변의 야경 개발 ▲ 고품질의 해양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시설 설치 ▲ 국제회의장 신설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 본부장은 “국제적 호텔 체인의 투자 유치와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 외국 방문객들을 위한 오락과 레크레이션 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미래학회장인 티모시 맥이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 사회와 경제 부문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를 조명하고, 한국이 녹색 해양산업을 선도해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MIT 대학의 마이클 조로프 교수는 ‘신 녹색 해양 경제’라는 새 개념을 제시해,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한국과 세계가 해양산업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미 FTA 추가협상 논의

美 새정부 출범후 첫 한·미 통상장관 회담

지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미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4일 워싱턴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미새 행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 추가협상 논란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2일 런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 FTA 진전을 위해 협력 키로 합의하면서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이에 관한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가전로봇 특화 육성 사업 선정 이어

지경부 ‘로봇 서비스’ 2개 사업 선정

광주 로봇산업 선도 호재

광주시가 지능형 로봇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호재를 맞고 있다.

광주시는 7일 “최근 국비지원 300억 규모의 ‘가전로봇 특화육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9년도 서비스로봇 시장·시범 서비스 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남대 로봇연구소의 ‘화초로봇 상용화를 위한 시장검증 사업’과 레드원테크놀로지의 ‘교육·연구용 국제표준 네트워크 기반 이동로봇 확산 사업’ 등이다.

‘화초로봇 상용화를 위한 시장검증 사업’의 사업비는 3억원(국비 8천만원)으로 수요자 반응사를 통해 화초로봇 플랫폼을 수정, 보완하고 시장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업이다. 화초로봇은 인공 화초의 실내장식 기능에 가습·방향 등 가전기능을 결합한 로봇이다. 시는 이 로봇을 상용화한다면 서비스 로봇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연구용 국제표준 네트워크 기반 이동로봇 확산 사업’은 사업비 3억1천만원(국비 7천만원)으로 실내외에서 주행 가능한 이동로봇 플랫폼을 제작하고 오는 10월 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로봇 실용주제행사’와 연계해 기술검증과 평가를하게 된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소규모인 지원금액에도 지능형 로봇산업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테크노파크에 들어설 가전로봇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해 광주시를 가전로봇 등 지능형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둘이 하나되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웁니다

2009년 10월 1일
한국로봇공사, 대한민국공사가 한국로봇기술지원센터로 새롭게 대체됩니다

• 새마을금고 주택관련 협약 체결
• 새마을금고 수출 지원사업 협약 체결
• 새마을금고 산업인력개발원과 협약 체결

한국로봇공사
한국로봇기술지원센터
한국로봇기술지원센터